

민주·한국당 예산안 처리 합의... 30야 반발

일자리 등 5조원 감액
오늘 본회의서 처리키로
선거제 개편안 언급 없어
손학규, 단식 투쟁 돌입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6일 오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합의의 결과를 발표하기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내 제1당이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원내 제2당인 자유한국당이 470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6일 최종 합의했다. 이로써 법정 시한(12월2일)을 훌쩍 넘기고서야 예산안의 본회의 통과가 가능해졌다.

하지만, 선거제 개혁과 예산안의 연계 처리를 요구한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 3당은 거대 양당의 아합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 정국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통해 합의안을 추진 받은 뒤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 등을 포함한 최종 합의안을 발표했다.

양당은 또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일자리 예산 및 남북협력기금의 일반회계 전입금 등을 포함, 총 5조원 이상을 감액하기로 하고 정부가 요구한 내년도 국가직 공무원 증원 인력 중 3000명을 감축하기로 했다.

양당은 내년 7월부터 고용보험의 구급급여 지급수준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높이고, 지급기간은 '90일-20일'에서 '120일-270일'로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양당은 내년 1월부터 소득 관계 없이 만 0세에서 만 5세 아동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9월부터는 지급대상을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최대 생후 84개월)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양당은 지방소비세는 현행 부가가치세의 11%에서 15%로 인상하는 한

편 종합부동산세는 조정대상 지역 내의 2주택에 대한 세부담 상환을 200%로 완화하고, 1세대 1주택자의 보유기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5년 이상 보유시 50%로 상향하기로 합의했다.

이외에도 금년 내에 국제 4조원을 조기에 상환하고, 동시에 내년도 국제발행 한도는 정부예산안보다 1조8000억원만 추가 확대하기로 했다

양당 의석 수를 합치면 과반수를 훌쩍 넘어 예산안의 7일 본회의 처리 가능성은 크지만 합의안에는 선거제 관련 내용은 전혀 없었다.

이 때문에 선거구제와 예산안의 연계 처리를 요구한 나머지 야3당과의 협치 틀을

깨고 거대 양당간 '밀실 합의'를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 같은 비판에도 양당이 예산안 처리 합의를 이룬 건 이미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12월2일)을 넘긴 데다 정치권이 민생을 외면하고 당리당략에만 골몰하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고조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야3당의 강하게 반발하면서 정국이 경색하고 있다.

야3당은 민주당과 한국당의 잠정 합의 발표 후 긴급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과 한국당의 잠정합의를 '밀실 아합'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등은 국회 정론관에

서 한 합동기자회견에서 "민주당과 한국당이 결국 정치개혁을 위한 국민적 열망을 거부하고 기득권 동맹을 선택했다"면서 "양당의 기득권 욕심이 정치개혁의 꿈을 짓밟고 있다"고 강력하게 규탄했다. 특히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선거제도와 예산안은 함께 가야 한다. 함께 갈 때까지 제가 단식을 하고 그것이 안되면 저는 로텐더에서 제 목숨을 바치겠다"며 단식 투쟁까지 돌입했다.

무엇보다 야3당이 민주당과 한국당의 예산안 강행처리 시도 저지에 나설 경우 본회의 처리과정에서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한국당 '박근혜' 갈등

친박계 석방론 확산...복당파와 탄핵 등 입장차

자유한국당 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불구속 재판(석방)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으나 친박(친박근혜)계와 비박(비박근혜)계 간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친박계 핵심인 윤상현 의원은 6일 국회에서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와 대한민국 바로 살리기 제4차 토론회'를 열어 박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에 대한 법적 문제점을 지적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윤 의원은 인사말에서 "좌파혁명의 무서운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당은 과거의 (계파)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서로 네 탓 공방만 하고 있다"며 "당내 모든 정치적 차이를 극복하고 단일대오를 이뤄서 반문(반문재인)연대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토론회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탄핵에 찬성했던 반대했던 모두가 역사의 죄인이다. 스스로 고해성사를 하고

현 정부에 맞서서 대응해야 국민 앞에 최소한의 용서를 받는 길"이라고 말했다.

복당파 여상규 의원도 이날 토론회에서 "다음 대선에서 보수정권을 재창출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며 "지금 감옥에 갇힌 두 전직 대통령을 생각해서라도 보수세력이 서로 네 탓만 하지 말고 뭉쳐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윤 의원은 같은 계파 홍문종 의원과 함께 비박계 김무성·권성동 의원을 최근 만나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재판이 부당하다는 데는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탄핵과 보수분열의 원인 등 그 외 모든 이슈에 대해서는 입장차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홍 의원은 이날 오전에만 세 차례 인터뷰를 하며 "보수 진영이 하나가 되려면 복당파의 고해성사와 사과가 먼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박지원 "한국당 내년 4월 쪼개질 것"

"박근혜 구속 만기 시점 분열...차, 의원 당선시킬 힘 있어"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구속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만기 시점인 내년 4월, 자유한국당이 '친박당'과 '비박당'으로 쪼개지는 분당(分黨) 사태를 맞게 될 것이라고 6일 전망했다.

박 의원은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 "(지난달 8일 방송에서) 정계계면 불씨는 제가 '손학규 대표'로부터 나온 거다"라고 했다. 한국당이 인적정산을 하면, 친박이 나간다. 그러면 바른미래당에 있는 몇 분은 비박당으로 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구속만기 시점인 내년 4월) 이때까지 대법원 선고가 나오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박 전 대통령은 존재만으로도 국회의원을 당선시킬 힘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검찰 등이 다른 혐의로 구속연장을 할 수 있지 않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박

의원은 "다른 거로 연장하면 저는 그건 안 좋다고 생각한다"며 검찰 등도 그렇지는 않느냐를 두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은 지난 9월 대법원에 올라가 현재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에 배당돼 있다. 최대 구속연장 기간을 고려하면 박 전 대통령의 구속만기 시점은 내년 3-4월께다. 이 시점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을 경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박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이 불구속으로 풀려나 후 2020년 총선까지 "1년 6개월이 남았다"며 "3김, 박근혜 이 내분은 불펜만 어떤 지역에 꽂아도 당선된다"며 "그렇다고 (친박의원들이) 거기에 가면 안 된다. 시대정신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점점 못찾는 '유치원 3법' 회기내 처리 불투명

교육위 법안소위...여야, 회계 처리 방식 놓고 평행선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급규칙법)의 표류가 장기화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6일 법안심사소위원회 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각각 제시한 '유치원 3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했지만 교육부 국가 회계관리 일원화 여부, 교비 교육목적 외 사용에 대한 법적조항 마련 등 핵심쟁점에서 평행선을 달렸다.

한국당은 사립유치원이 사적 재산의 영

역에 속해 있다는 전제 아래 교육비 회계의 이원화(국가회계·일반회계)를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회계 투명성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선 교육비 회계를 국가관리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맞섰다.

한국당 과상도 의원은 "정부가 지원하는 돈과 학부모 부담금(원비)에 차이를 뒤야 한다"며 "정부가 주는 돈과 달리 학부모가 낸 돈은 사적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 박경미 의원은 "학부모

부담금이 원장에게 용돈으로 주는 돈이 아니고, 교육적 목적에 맞게 써달라고 주는 돈"이라며 "학부모 부담금을 일반회계로 가져가고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건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했다.

유치원 교비의 교육목적 외 사용에 대한 법적조항(형사처벌) 마련에 대한 의견도 달랐다. 과 의원은 "개인재산을 마음대로 한다고 해서 정부가 처벌하는 건 과도한 규제"라며 "그러려면 사립유치원을 개인재산으로 두지 말고 정부가 매입하든지, 법인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처벌조항을 만들지 않는다면 유치원의 교육비 사적 유용행위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유치원들은 사적 유용이) 걸리면 환수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은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큰 전제하에서 교비를 교육목적 외에 사용했을 때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정도로 최소한의 처벌규정을 마련하자"고 최종 제안했다.

하지만 교육위 법안소위에서 통과되더라도 교육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거치는 절차가 남아 오는 9월 끝나는 올해 정기국회 내 처리가 어려워진 것은 물론 연내 처리도 불투명한 상태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보수 2야 김상환 청문보고서 채택 안기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6일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이날 "김 후보자는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등이 있고, 심지어 자신과 같은 위장전입을 한 사람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까지 했다"며 "이 같은 사람을 대법

관으로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도 "김 후보자는 (자신의 위장전입과) 비슷한 위장전입 사건에서 징역형을 선고했고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등이 있다"며 "바른미래당은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기로 잠정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슬라브 옥상스틸 방수 및 지붕공사

단열재가 부착된 스틸(강판) 패널

옥상 스틸방수

아파트, 주택, 원룸, 학교, 상가건물
공공건물, 대형빌딩 등 (슬라브, 옥상)시공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여름의 뜨거운 열기!

지붕공사

한옥, 사찰, 축사, 하우스
데스리, 펜션, 전원주택 등 시공

옥탑이 없는 평 슬라브
주택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 ▶ 방수와 단열 이중효과!
- ▶ 옥상 사용 및 태양광 설치 전과 후 시공 가능!
- ▶ 시공후 관리 보수 용이!
- ▶ 방수 한번 시공으로 고민 끝!
- ▶ 최신공법의 특수 방수!
- ▶ 냉난방비 절감 효과!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트윈스틸 (모던건설) 시공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

착한보청기협동조합

보청기

70~50% 할인 이벤트

"불만족시 1달 안에 100% 환불"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062) 655-6544

062) 362-3336

✓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

산수오거리지점

돌고개지점